3명분 일감, 연봉 1400만원에 24시간 풀근무 대체

〈평균 연봉 1억원씩〉 〈연간 유지비〉

노조 강경 대응 예고, 왜?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 현장 투입에 대해 노조가 강경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틀라스를 앞세운 현대차그룹의 '피지컬 인공지능(AI)' 주도권 선점 전략이 예상보다 이른 내부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

◆노조 vs 로봇 전면전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2일 배포한 소식지를 통해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면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며 "노사 합의 없이 단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달 6~9일(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아틀라스를 공개하고, 로봇을 핵심 성장 축으로 하는 '피지컬 AI' 전략을 공식화했다. 그룹은 2028년까지 아틀라스 3만 대 양산 체제를 구축해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아틀라스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내 제조 현장에 투입되기 전 로봇을 훈련하는 곳인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 센터'(RMAC)의 문을 연다는 일정도 제시했다.

노조는 아틀라스 공개 이후 현대차 주가가 급등한 상황을 두고 "자동차 생산·판매가 주력인 기업이 로봇·AI 기업으로 재평가되며 시가총액 상위권에 오른 것"이라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기술 경쟁력이 기업 가치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 구조 재편이라는 불안 요인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1대당 도입 가격 2억원 수준
업계 "2년 내로 투자비 회수"
40도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
노조 "노사 관계 파탄 원하나"

◆노동자 대체 우려↑

노조의 위기감은 비용 구조 비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노조는 "평균 연봉 1억 원을 기준으로 24시간 가동 시 노동자 3명의 인건비는 연 3억 원이 들지만, 로봇은 초기 구입비 이후 유지비만 발생한다"며 "현대차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한 AI 로봇 투입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와 증권가에서는 아틀라스 1대당 가격을 약 2억 원, 연간 유지 비용을 약 1천400만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대차 생산직 평균 연봉을 감안하면 2년 안팎에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생산 규모가 확대될 경우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기술적 특성 역시 노동자 대체 우려를 키운다. 아틀라스는 최대 50㎏의 하중을 들어 올릴 수 있고, 섭씨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에 이르는 극한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작업을 하루 이내에 학습하고, 배터리 교체 시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24시간 가동이 가능해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간 작업자보다 훨씬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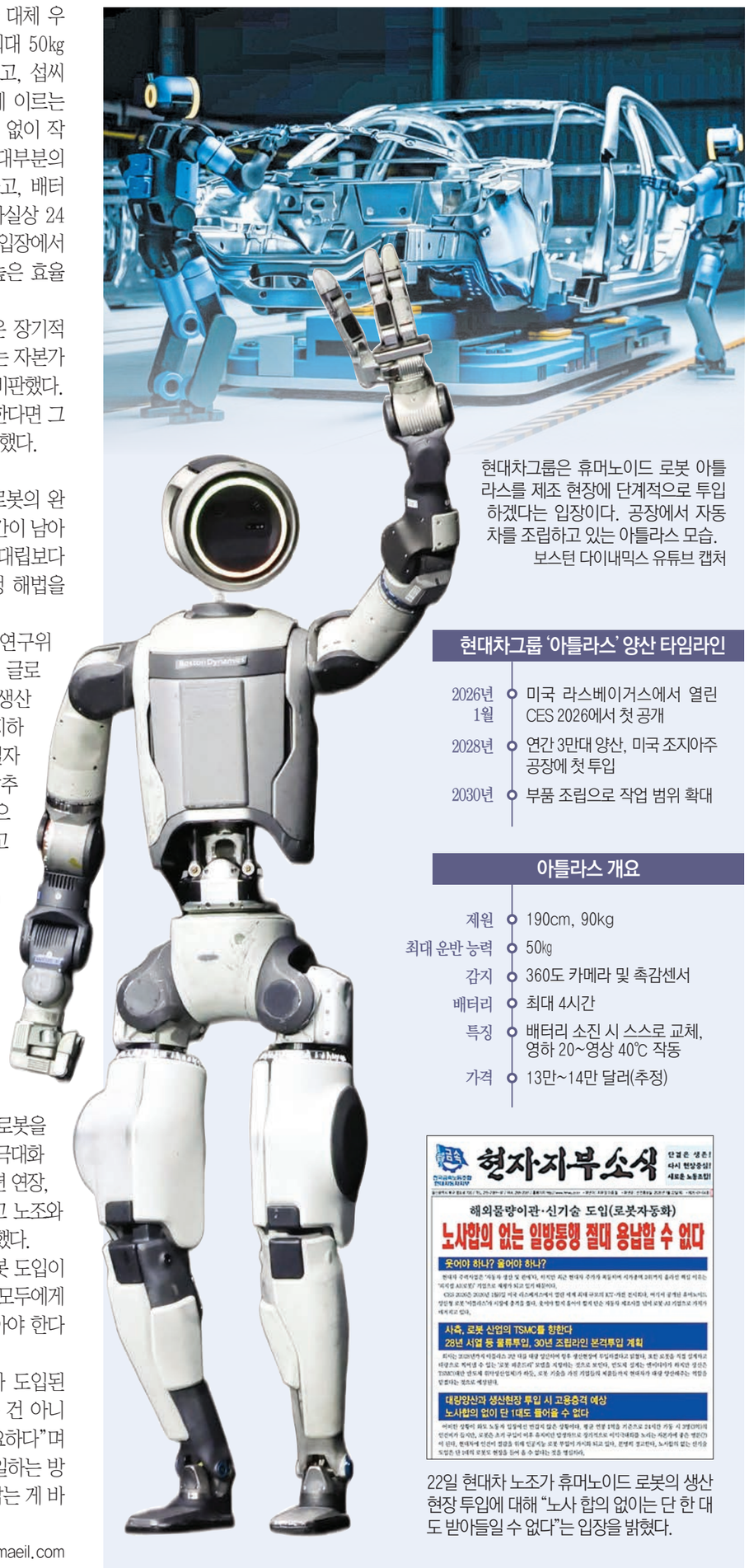
노조는 이를 두고 "로봇은 장기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가에게 좋은 명분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사 관계 파탄을 원한다면 그 끝을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사 갈등 해법은?

전문가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완전한 상용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노사가 감정적 대립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생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휴머노이드 상용화는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생산비를 낮추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큰 흐름"이라며 "일자리를 줄이기보다 비용을 낮추고 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석 기자 newnks@imaeil.com



현대차그룹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제조 현장에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장에서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는 아틀라스 모습. 보스턴 다이내믹스 유튜브 캡처

현대차그룹 '아틀라스' 양산 타임라인

2026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첫 공개
2028년	연간 3만대 양산,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첫 투입
2030년	부품 조립으로 작업 범위 확대

아틀라스 개요

제원	190cm, 90kg
최대 운반 능력	50㎏
감지	360도 카메라 및 촉감센서
배터리	최대 4시간
특징	배터리 소진 시 스스로 교체, 영하 20~영상 40℃ 작동
가격	13만~14만 달러(추정)

현자자부소식

해외물량이관·신기술 도입(로봇자동화)

노사합의 없는 일방통행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사측, 로봇 산업의 TSMC를 향한다
28년 서업 등 물류투입, 30년 조립라인 본격투입 계획

대량양산과 생산현장 투입 시 고용충격 예상
노사합의 없이 단 1대도 들어올 수 없다

22일 현대차 노조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에 대해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계 확산 기류…노동자 변해야 산다

현대차그룹 사태를 계기로 로봇 도입에 따른 노사 갈등이 자동차를 넘어 전체 산업계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봇 도입 가속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한국은 제조업 종사자 1만명당 1천12대의 산업용 로봇을 보유하고 있다. 로봇 밀도로는 세계 1위다. 로봇 밀도는 한 나라의 제조업 자동화 수준을 비교하는 대표 지표로, 인력 1만명당 가동 중인 산업용 로봇 수를 뜻한다.

노사 갈등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산업계는 로봇에서 대안을 찾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노사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로봇이라는 것이다.

한화오션·포스코 피지컬AI 검토
기피 작업 활용 땐 생산성 극대화
전문가 "회사·노동자 모두에 기회"

로봇 도입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포스코 등 중후장대(重厚長大) 기업은 물론, CJ대한통운 등 물류기업까지 피지컬AI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산 현장의 로봇 도입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작업에 로봇을 적절히 활용하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정년 연장, 신규인력 충원 등을 둘러싸고 노조와 머리를 맞댈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로봇 도입이 오히려 회사와 인간 노동자 모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지컬 AI가 도입된다고 무조건 일자리를 잃는 건 아니다. 노조의 사고 전환도 필요하다"며 "노조가 앞으로 임금보다 '일하는 방식'을 협상해 성장 기회를 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우태 기자 next@imaeil.com

근로감독 사업장 5만→9만곳 확대 "적발 땐 사법처리"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사업장 감독의 강도를 대폭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현장에서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고 근로·산업안전 감독 대상 사업장을 지난해 5만2천곳에서 올해 9만~9만2천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지시보다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우선 적용하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노동 분야 감독 대상은 2만8천곳에서 4만곳으로, 산업안전 분야는 2만4천곳에서 5만곳으로 각각 늘어난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원칙 아래 그동안 신고 사건에 한정해 처리하던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체불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근로자만이 아니라 동일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까지 체불 여부를 전수 조사해 '숨어 있는 체불'을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체불 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은 당해 사건 조사에 그치지 않고 전수 감독을 통해 숨어 있는 체불을 적극 찾아내겠다"며 "체불 규모와 고의성, 반복성이 확인되면 수시·특별감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도 중점 과제다. 연간 감독 대상을 기존 200곳에서 400곳으로 확대하고, 포괄임금제 오·남용 의심 사업장과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포괄임금 원칙 금지 입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제도 시행 이전이라도 감독을 통해 남용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안전 분야 감독관도 지난해 초 895명에서 올해 말 2천95명으로 늘린다. 노동 분야 감독관까지 포함하면 총 2천명가량을 증원한다. 패트롤카는 146대에서 286대로, 드론은 22대에서 50대로 확대 배치해 벌목·지붕공사 등 고위험 작업에 대한 입체적 감독을 강화한다.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법 위반 시 단순 시정지시에 그치지 않고 사법처리·행정처분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적발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의 전조로 꼽히는 중상해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신설된다.

정우태 기자